

제9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예선토론발제문

「논제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MZ세대'의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은?

남북교류는 북핵 개발에 따른 국제제재, 금강산 관광 중단 및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조치 등에 따라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조치 논의는 첫 걸음도 떼지 못했고,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남북교류 재개는 멀게만 느껴진다.

KBS 남북교류협력단이 지난 8월, 광복절을 맞아 일반 국민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71.4%에 달했다.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며 남북협력을 대비한 사전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평양의 비핵화 노력,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쉽게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평양의 단계적 비핵화를 이룩하고,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에서 한반도 미래의 주역인 MZ세대들은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트렌드 전환에 민감하고 기술 습득이 빠른 특징을 가진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메타버스 등 기술의 발전과 융합으로 사회 변혁의 흐름 속에서 언택트 기술을 활용한 문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MZ세대 영향력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남북교류 협력 방안을 그대로 계승하기에는 제반 상황과 여건이 구조적으로 달라졌다. 올해 실시한 통일연구원의 국민 통일인식 조사에 따르면, MZ세대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낮았다. 전쟁과 분단을 직접 경험한 기성세대와는 달리, MZ세대는 태어난 순간부터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당연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에 북한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성세대가 북에 대한 경계가 있었다면 MZ세대는 무관심의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결국, 기존의 남북교류 협력 방안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교류·협력의 일환에서 한반도 미래의 주역인 MZ세대들은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분단의 아픔과 상흔을 간직한 이산가족(흩어진 가족)의 생존자 수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분단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MZ세대들에게 '한민족'에 방점을 둔 민족 통일방안은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에 본 논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정치·외교·경제적 차원을 포함하여 사회·문화·교육 등 다방면에서 MZ세대가 남북교류 협력을 어떻게 주도할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 '기술의 발전'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기초하여 남북교류 협력의 오늘을 진단하고, 책임지는 내일을 향한 MZ세대의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방안을 자유롭게 논해주기를 바란다.

「논제2.」 남북 통합의 과정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창의적 활용 방안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따른 분단의 평화적 유지·관리를 넘어 새로운 평화의 단초를 제공할 남북 접경 지역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비무장지대란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을 기점으로 남북 양측이 각각 2km씩을 설정한 지역으로,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따라 무장을 할 수 없는 지역을 뜻한다. 남북 정상 및 수뇌부 간의 회담 장소 등 '만남의 공간'으로도 사용된 적 있는 비무장지대는 단순한 협상의 장소를 넘어 정치적 상징성, 생태적 특수성 등의 확장적 의미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남북교류 협력 분야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9년 개최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한반도가 “평화관광, 환경생태관광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히며 DMZ 관광사업의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를 통해 다양한 생태자원을 갖춘 비무장지대를 세계 유일의 '평화 관광지'로 브랜드화하는 활용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고, 국제평화지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DMZ 평화의 길'에 140억 원을 투자하여 도보 여행로를 정비하고, 브랜드이미지 (Brand Identity, BI)를 개발했다.

한편, DMZ는 기존에 논의된 전통적 접근 방식이 아닌 창의적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2020년 9월 개최한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정책토론회는 정부의 기존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DMZ 활용방안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통일의학센터는 DMZ에 남북 공동 생명보건단지를 조성하여 교류·협력을 구축하는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다.

DMZ와 관련한 교류·협력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5.24조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에 따라 지속 가능한 협의 체계 구축과 남북 당국 간 합의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통합 및 통일 과정에서는 기존 정책을 계승·발전시키는 가운데 남과 북이 상호협력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한 통합 및 통일을 위해서는 DMZ 활용의 창의적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접경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공동의 접근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새로운 평화 교류 방안으로서 DMZ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제의 지향점과 본질은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과 정치·법 제도적 '통일'이다. 공간적 상징성을 지닌 무한한 가능성의 접경 지역 DMZ에서 남과 북의 교류·협력을 보다 증진 시킬 수 있는 창의적 활용방법을 논해주기를 바란다.